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정책 전환(1989~1990)*

김형률**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1989년 여름부터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가을까지 소련의 독일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추적해 보았다. 1989년 여름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로 시작된 동독정권의 위기로부터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인 독일통일 불가에서 통일독일의 나토(NATO) 탈퇴라는 조건부 통일 고려를 거쳐, 1990년 7월 나토에 속한 통일독일 허용이라는 고르바초프(Gorbatschow)의 개인적 결단으로 급변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독일 통일과 소련의 붕괴는 마치 냉전의 종말이라는 하나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낸 두 개의 핵심적인 지류 역할을 하였다.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고르바초프의 사회주의 개혁 노선이었던 소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서독의 재정적 지원을 핵심으로 한 서방측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페레스트로이카를 살려 내기 위하여 나토에 잔류하는 통일독일을 허용하는 길을 택하였으나, 냉전체제를 기초로 구축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로 인한 그 기초로부터의 붕괴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성공은 독일통일이었으며 가장 큰 실패는 소련의 붕괴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원초적으로 이 두개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던 것이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4년도 교내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momo@sookmyung.ac.kr

1. 서론

1980년대 말 시작된 소련제국의 붕괴는 제국의 중심이었던 소련 내부의 질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독일정책에 대한 변화의 진원지 역시 소련 내부의 질적인 변화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소련 내부의 질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계획경제 하에서 오랜 시간 누적된 경제적 위기를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고르바초프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 내부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질적인 변화는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구조를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변화시키려는 내부의 총체적인 압박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냉전시대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위로 기울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체제경쟁의 종말로 방향을 잡은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소련의 독일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거쳐 결국 독일통일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고르바초프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1989년 여름부터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1990 가을까지 소련의 독일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전환의 배경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을 목표로 한 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 급기야 1969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 침공 이래로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함으로써 소련제국을 무력으로 지탱하여 온 '브레즈네프 독트린(Breschnew-Doktrin)'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1989년 7월 8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정상들은 아래와 같은 '부카레스트 선언'을 공포함으로써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소련제국으로부터의 독립 즉 소련제국의 붕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 국가의 안정은 다른 국가의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내정간섭이 배제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재판관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Europa-Archiv, 1989: D605).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 서기 할린(Falin)은 1989년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호네커(Honecker)가 우리의 개혁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다 해도 우리는 동독의 내정에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내정 간섭이란 그의 후계자에 대한 지원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원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Falin, 1997: 149).

실제로 소련은 1989년 동독의 반정부세력을 강화시키거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동독정치국 내부의 호네커를 실각시키려는 세력들의 지원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호네커의 자발적인 퇴진에 앞서 고르바초프와 소련비밀경찰(KGB) 총수였던 류츠코프(Krjutschkow)가 모드로프(Modrow)를 지원했다는 당시의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Modrow, 1998: 311). 고르바초프의 단호한 거절은 반호네커 세력들의 개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도 기인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다시는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그가 주창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 개혁을 위한 신사교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소련은 더 이상 동독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 포괄하는 소련제국을 지탱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1989년 6월 13일 서독을 처음으로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이미 서독수상 콜(Kohl)과의 공동성명에서 “모든 민족과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서로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만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독일문제에 대한 무력적 간섭의 배제를 분명히 하였다 (Europa-Archiv, 1989: D382). 더욱이 고르바초프는 1989년 9월 말 이래로 라이프찌히(Leipzig)를 비롯한 동독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들을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의 개혁이라는 원칙에 상응하는 동독주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무력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Oldenburg, 1998: 13). 동독 내정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분명한 불간섭 의지는 동독주민들에게 고르바초프 자신이 공표한, 각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는 소위 ‘선택의 자유(Freiheit der Wahl)’ 원칙에 대한 강한 신뢰를 심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동독에는 이러한 자유를 실행으로 옮길 능력이 있는 어떠한 확고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동독 정권은 한편으론 막대한 국가부채와 다른 한편으론 서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동독 사회주의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 또한 없었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 이래로 동독의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심화에 꾸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동독의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심화는 소련 입장에서 볼 때 두 독일국가간의 긴밀성의 심화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호네커를 포함하는 동독 지도부들 개인에 대한 의구심이었으나 소련은 점차 서독에 대한 동독의 경제적 종속의 심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물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 두 독일국가간의 경제외적 즉 정치적 긴밀성의 심화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만을 밝혀왔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고르바초프 역시 일관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독일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89년 1월 호네커가 그의 최초의 서독방문에서 베를린 장벽은 50년 내지 10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며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정치개혁, 즉 민주화는 자본주의와의 대결 구도에서 사회주의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에 이로울 뿐이라는 이유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밝힌 것은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소련의 경제적 능력은 더 이상 동독에 경제적인 원조를 줄 수 없다는 물질적인 판단에도 기인하였다(Herrmann, *Neues Deutschland*, 1997/9/6).

따라서 이러한 동독의 누진적이며 구조적인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와 의지는 거리의 시민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199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인들의 67%가 통일이 된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Neuman, FAZ 1998/3/5). 소수의 인권운동가와 반정부인사들로 시작된 이러한 동독에서의 사회주의 개혁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정권의 개혁 실현에 대한 원초적 불능을 배경으로 짧은 시간 안에 동독인들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9년 가을 이래로의 동독의 정치적 소요사태에 대한 소련의 분명한 내정 불간섭 입장 표명은 동독정권의 입장을 현저하게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헝가리와 체코와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난민들이 서독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고르바초프는 동독주민들의 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으로의 진입과 동독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1989년 여름 “동독정부와 동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동독 주둔 소련군은 병영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듯 고르바초프는 1985년 그가 공표한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을 동독정권의 위기라는 실제 상황 하에서도 적용시킴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소련의 개혁 노선을 거부하였던 호네커의 퇴진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다(Falin, 1997: 150).

이러한 평가는 호네커가 퇴진한 직후인 1989년 10월 21일에 열린 74명의 장군들이 참석한 동독의 국가보위부 내부 회의에서 동독의 국가보위부 장관 이었던 밀케(Mielke)의 “소련 없는 동독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우리의 행동과 계획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소련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해져야만 한다”는 언급에서 확인 될 수 있겠다. 밀케는 소련의 군사적 개입의 확고한 포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동독이 자신의 정권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개혁 노선에 동참하는 정치적 지혜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Wolle, 1998: 296).

3. 새로운 독일정책으로의 전환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의 자진 사퇴 이후 소련은 동독정권이 그의 후임자인 크렌츠(Krenz)의 주도하에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동독의 정치적 안정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동독정권의 안정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1989년 11월 9일 소련과의 사전 합의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소련 정치국내의 일부 강경파들은 베를린장벽의 재구축을 위한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고르바초프와 소련의 외무장관 셰바르나체(Shevardnadze)는 호네커의 퇴진뿐만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역시 동독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시켜 동독 사회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Oldenburg, 1998: 15).

또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동독에서의 모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소련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구호나 행동도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고르바초프의 동독정권의 안정에 대한 기대는 크렌츠와 그의 뒤를 이은 모드로프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동독정권의 개혁을 통한 안정이라는 독일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으로 몰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가 그치지 않고 동독의 국가로서의 체제가 서독과의 일정한 정치경제적 내적 통합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1989년 11월 28일 서독 수상 콜은 '십개항 계획(Zehn-Punkte-Plan)'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주도권 획득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서독의 독일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의 최종 목적은 동서독간의 '국가연합(Konfoederation)'으로 명시되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은 독일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국제법적 근거는 포츠담회의로서 그것은 분단되지 않은 '전체로서의 독일(Deutschland als Ganzes)'에 대한 승전국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동서독 두 국가간의 내적 통합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승전국들에게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단지 승전국들은 그 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체로서의

독일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내적 통합에 대한 거부의 권리는 없었으나 통일의 외적 조건 즉 통일된 독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승전국들 모두 관여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인하여 실제로 독일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간의 내적 통합의 길과 승전국을 포함한 두 독일국가간의 외교적 해결의 길이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었고 서독정부는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적 통합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이루어 냄으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외적 조건의 합의를 압박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독의 동서독간의 ‘국가연합’ 제안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평화적으로 독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들어서는 입구였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국가로서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서독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중국적으로 자체 붕괴에 직면하고 있었던 동독으로서도 서독과의 국가연합은 한 국가로서의 존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동독 수상 모드로프는 1989년 12월 4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두 독일국가의 존립을 조건으로 한 서독과의 국가연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4/12). 서독의 국가연합안에 대하여 고르바초프는 1989년 12월 4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미숙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나 “국가연합이 실현되더라도 두 독일 국가의 존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서독의 국가연합안의 실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4/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 회의에서 동독의 수상 모드로프가 두 독일국가의 존립을 조건으로 한 국가연합안의 수용을 제안하였을 때 소련은 그것이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동독 주민들을 곤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1989년 12월 19/20일 동독 수상 모드로프는 동독 드레스덴(Dresden)에서 서독 수상 콜과의 첫 번째 회담에서 동독과 서독의 국가적인 통합을 거부하게 된다(Oldenburg, 1998: 17). 아울러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나체는 1989년 12월 19일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에서 당시 독일통일에 대한 공통된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를 중

심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일통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경고를 하였다.

독일통일이 미래에 다른 국가들의 안보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는 정치적, 법적, 물질적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Europa-Archiv, 1990: D132).

그러나 같은 날인 12월 19일 서독 수상 콜의 동독 드레스덴 방문에서의 “우리는 하나의 민족(Wir sind ein Volk)”이라는 열광적인 구호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동독 주민들에 의하여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동독이 대책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감을 보여주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대량 이주와 동독 중앙정부와 지방기관들의 마비 상황에서 1990년 1월 20일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나체는 동독 수상 휘셔(Fischer)에게 처음으로 소련은 “독일인들이 국가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응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련의 조건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동서독의 내적 통합의 절박성을 인정하게 된다(Oldenburg, 1998: 17).

독일의 내적 통합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는 소련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렇다면 독일통일로 가는 진행 과정에서 소련이 선두에 서서 그에 상응하는 최대의 대가를 얻어 내야한다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1990년 1월 26일 소련의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었다(Gorbatschow, 1995: 714). 이것은 이전까지의 소련의 독일정책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이 소련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공표한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집권 세력들은 동독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소련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담보로 하여 유럽의 공동안보를 목표로 한 ‘공동의 유럽의 집(Gemeinsamens europaisches Haus)’이라는 그들의 구상은 시도해 볼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대가없는 독일통일은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 반개혁 세력에게 고르바초프의 개혁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외교에 있어서 독일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소련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함으로써 결국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1990년 2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서독 수상 콜에게 독일통일을 전제로 첫째 통일독일의 나토 탈퇴 둘째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 셋째 기존의 국경선 인정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동독과 서독의 내적 통합에 대한 열쇠는 독일인들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서독 수상 콜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는 나에게 독일인들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통일의 시점과 방법 또한 독일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이 분명히 하였다”고 전독일인들을 향한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Europa-Archiv, 1990: D193).

당시 고르바초프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과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두 독일국가간의 내적 통합 과정의 장기화에 대한 기대는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의 마지막 의회선거의 결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뭉친 모든 민주정당들의 연정이 탄생함으로써 사라져 버렸다(Schoellgen, 1999: 192). 드메르지에(de Maiziere)를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한 동독 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근거하여 서독정부와 독일통일에 대한 협상을 실현시킬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해 5월 동독과 서독간의 ‘통화, 경제, 사회연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고 그해 7월 1일 실행되게 된다(Archiv der Gegenwart, 1990: 34431).

이렇듯 두 독일 국가 간의 내적 통합이 예상치 못했던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1990년 3월 이후의 소련의 독일정책은 현실정치적 입장에서 통일독일의 외적 조건에 대한 협상에 치중하게 된다. 소련의 통일독일에 대한 외적 조건에 관한 제안들은 전통적으로 독일정책을 수립하였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과 외부부의 제3유럽국에서 입안되었으며 중심 주제들은 통일독일과의 평화조약문제, 2+4회담에 더 많은 참가국들을 포함시키는 문제, 통일독일의 중립화 문제, 통일독일의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이중적 소속문제, 독일통일 이후 장기적인 소련군 주둔문제, 동독의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독일로의 편입 저지

문제들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 서기로서 오랜 동안 전통적인 독일정책의 입안자였던 할린은 고르바초프에게 그해 3월 제출한 독일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소련의 입장에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의 사회주의 포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는 소련의 안보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통일독일을 제시하였다(Falin, 1997: 314).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입안자들의 제안들은 2+4회담에서의 협상안으로 채택되거나 주지하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관철되지 못하게 된다. 소위 '2+4회담'은 통일된 독일의 외적 조건 즉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승전국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제한된 전 독일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독과 동독 그리고 4대 승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외무장관 회의로 양 독일 국가간의 내적 통합 과정과 분리하여 진행시킬 목적으로 미국과 서독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1990년 3월 14일 서독의 수도 본(Bonn)에서 열린 첫 번째 2+4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승전 4개국과 동서독 정치대표자회의에서 소련은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은 실제로는 서독이 동독을 합병하는 것임으로 그것은 서독의 기본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유럽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칠 비합법적인 방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Oldenburg, 1998: 25). 이러한 소련의 독일의 내적 통합에 대한 조건적 간섭은 이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과정의 현실로 볼 때 최후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론 소련 내부의 독일정책에 대한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명분을 주고 다른 한편으론 급변하고 있던 독일의 현실에 대응해야만 했던 실무자들이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현실정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1990년 5월 3일 소련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통일독일의 나토 존속에 대한 결연한 반대 역시 이틀 후인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4회담에 대처하기 위한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즉 2+4회담에서의 소련의 기본 전략의 핵심은 동독과 서독의 내적 통합과 통일독일의 외적 조건을 연계시킴으로써 중기적으로는 독일통일 과정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에도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 획득을 지연

시키자는 것이었다. 소련의 이러한 독일통일의 지연을 위한 강경 노선은 한편으론 독일통일에 대한 승전국들과의 협상에서 소련을 고립시킬 위험성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독일통일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던 미국에 반하여 독일통일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을 감지해 볼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련의 독일통일에 관한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협상은 동시에 현실적으로 당시 국가부도 상황에 놓여 있던 소련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제적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 5월 4일, 즉 독일통일에 관한 외적 조건에 대한 협상을 위한 첫 번째 2+4회담이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리기 하루 전날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나체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독정부가 200억 마르크의 조건 없는 차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Bierling, 1997: 451). 5월 14일 서독 수상 콜의 정치담당 비서 텔츨(Teltschick)과 독일은행의 관계자는 모스크바로 파견되고 몇 일후 콜은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게 된다(Teltschik, 1991: 230).

이 무렵 서독은 소련이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Baker)의 소위 '9개항 계획'에서 제안된 유럽의 근본적인 안보체제 변화라는 조건 안에서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Baker, 1995: 248). 이러한 판단을 배경으로 1990년 4월 28일 서독정부는 더블린(Dublin)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아울러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는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나체는 1990년 5월 23일 서독 외무장관 겐셔(Genscher)와의 회담에서 통일독일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동시에 속하는 일정한 이행기를 갖고 이를 위해 두 군사조약기구가 협력을 위한 조약을 맺을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된다(Genscher, 1995: 786).

1990년 5월 30일 워싱턴에서의 미소정상회담에서 국내의 긴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중심 의제로 채택하였던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정치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통일독일이 군사동맹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것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가능성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최초의 긍정적 표명이었다(Oldenburg, 1998: 26).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1990년 6월 7일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통일독일의 안보는 동서의 양대 지주에 의존해야한다는 확고한 소련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통일독일이 두 군사동맹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일정한 협력 양식을 만들어 낼 것을 재차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그는 통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서독과 동독은 각기 이전의 군사동맹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하며 서독군은 나토에, 동독군은 통일독일에 속하게 하며 동독 영토의 소련군은 계속 주둔할 것을 제안하였다(Oldenburger, 1998: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통일독일의 나토 귀속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이중적 입장은 당시 소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소련 외무부에서 독일문제를 담당하던 유럽 제 3국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의 전통적인 독일정책 입안자들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는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 군부 역시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독일통일 과정에 있어서 소련의 독일정책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던 서독기본법 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과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끝까지 반대하였던 당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 서기 활린의 평가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역시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나체를 중심으로 한 소위 '자유주의자들' 보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소위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한다(Falin, 1997: 190).

서독 외무장관 겐셔 역시 그의 자서전에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나체가 1990년 6월 11일 브레스트(Brest)에서의 그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성공되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최초로 언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Genscher, 1995: 805). 1990년 7월 1일 동독과 서독은 경제연합과 화폐연합을 실행시킴으로써 양 독일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 독일간의 경제 통합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독과의 빠른 정치적 통합을 원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독은 소련 국내정치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1990년 7월 5일 런던(London)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측은 이전까지의 서방측 핵전

략의 핵심이었던 소위 ‘유연한 대응(flexible response)’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최종적인 방어수단으로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소위 ‘런던 선언’을 공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동성명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한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겨냥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 한다(Europa-Archiv, 1990: 456).

이로써 나토는 한편으론 소련 내부의 전통주의자들의 안보 위기감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고르바초프의 국내정치에서의 입지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바르샤바 조약국들에 대한 주적개념을 폐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방측의 지원 하에 고르바초프는 1990년 7월 2일부터 14일에 걸쳐 개최된 제28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실질적인 전권을 재확인 받게 된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3분의 2는 여전히 고르바초프의 반대파들로 구성되었다(Zelikow and Rice, 1997: 469).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현실정치가들로 고르바초프의 독일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이었으나 그의 독일정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오히려 사회주의권의 총체적인 약화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그들을 메카시스턴(McCarthyisten)으로 비난하였던 외무장관 세바르나체에게로 돌아갔다. 반면에 고르바초프는 약화된 정치국의 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신에게 집중된 전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독일정책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보다 확장된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Oldenburg, 1998: 29).

1990년 7월 14에서 16일에 걸쳐 모스크바와 고르바초프의 고향 코카사스(Kaukasus)에서 연이어 진행된 소련과 서독의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외무장관 세바르나체와 자신의 측근이었던 체르나예프(Tschernjajew)와 살라딘(Sagladin) 세 명만을 대동하였다. 독일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손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Biermann, 1997: 681).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동독지역의 비무장화를 고수하였으나 서독 수상 콜조차 예상치 못했던 나토 조약의 제5조와 6조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도 적용됨을 인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최종적으로 허락하게 된다. 아울러 4년 이내

로 규정한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소련군의 철수 이후 나토에 속한 통일독일 군대의 동독지역 주둔을 허락하였다(Teltschik, 1991: 316). 이로써 1990년 5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부시(Bush)에게 최초로 암시한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마지막 2+4회담에서 동독과 서독 그리고 4개 승전국들은 “독일에 관한 최종적 규정에 관한 조약(Vertrag ueber die abschliessenden Regelungen in bezug auf Deutschland)”에 서명함으로써 독일통일에 관한 외적 조건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첫째로 통일독일은 동독과 서독 이외의 다른 모든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 한다는 것과 둘째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생산과 보유 및 사용권 포기 셋째로 독일군 병력을 37만으로 한정하며 소련군의 철수 이후에도 구동독지역에는 외국군은 주둔할 수 없고 단지 나토에 속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군만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Auswaertigen Amt, 1991: 167-171).

반면에 독일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는 이미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은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서독의 통화인 마르크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8월 23일 동독의회는 서독기본법 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Beitritt)’을 결정하였고 이어 8월 31일 두 독일정부는 통일독일의 건국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 두 독일 의회에 의해 승인되는 절차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완결된 내적통합은 마침내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에 대한 승전국들의 최종적인 조약을 이끌어 내어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동독의 각 주가 주 단위로 서독의 기본법 체계로 편입되어지는 방법을 채택한 궁극적인 통일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결 론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소련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소련식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소련의 우위적인 지배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동유럽인 들의 의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소련제국을 지

탕해온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지정학적 전략이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이래로의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있어서 독일문제는 가장 특수한 딜레마로 대두 되었다. 이미 1970년대 초반 이래로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인적 교류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재원을 원조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구축된 두 독일국가간의 내적 관계는 아무리 동독과 서독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분단을 천명하더라도 소련의 시각에서 보면 독일민족간의 내적 관계였던 것이다.

당시 소련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독일분단은 결국 인위적인 것이며 고르바초프의 내적 외적 개혁에 장애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핵 균형 시대에 동독에 34만 이라는 막대한 소련 주둔군을 배치시킬 필요성에 대한 재고가 소련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동독은 1989년 10월 호네커 퇴진 이전까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호네커 후임자들 역시 동독의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서독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정적 정치적 동반자 역할과 아울러 고르바초프의 유럽정책인 소위 '공동의 유럽의 집'이라는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유럽외교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1989년 11월 예기치 못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소련의 전통적인 독일정책 입안자들은 고르바초프의 독일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를린 장벽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소련이 서방측과의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바로 동독의 붕괴로 이어져 소련 안보의 최전선의 붕괴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고르바초프는 적어도 1990년 1월 말까지는 대다수 동독주민들은 자본주의체제인 서독과의 통일이 아닌 개혁된 사회주의체제의 동독을 원하고 있다는 확신을 근거로 개혁된 동독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독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폴란드를 선두로 하여 다른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통치체제에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소련의 경제상황 역시 국가부도의 위기로 치닫게 되자 이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내정에 관한 소련의 무력 사용을 배제시킨 고르바초프의 소련 안보에 대한 동독의 지정학적 가치 평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제국의 상황을 전략적 관점에서 파악한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을 배경으로 한 서독정부는 바로 이러한 소련의 경제적 위기상황과 독일정책에 있어서의 딜레마로부터의 탈출구를 고르바초프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점차 심화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배경으로 서독정부는 점진적으로 나토에 귀속된 통일독일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적어도 1990년 5월까지 이러한 미국과 서독의 통일독일의 외적 조건에 대한 목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그러나 소련과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통일독일을 유럽연합과 나토에 견고히 묶어둘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 하에 독일통일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들 역시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경제통합을 시작으로 동독과 서독간의 내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까지 진전하는 과정에 이르자 소련은 아무 대가 없이 외교적인 고립에 처하게 될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정부는 독일통일로 인한 소련의 안보 위기감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통일독일의 군사력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스스로 설정하였으며, 미국의 주도하에 나토 역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대결구조에서 협력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안보적인 환경조성과 아울러 서독정부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소련에 대한 단기적인 재정적 지원과 장기적인 원조와 교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1990년 7월 15일 고르바초프로부터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허락을 얻어내어 통일독일로의 최후이자 동시에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DS. (1989), Niederschrift ueber das Treffen der Repraesentanten des Warschauer Vertrages in Moskau am 4.12.1989, Berlin.
- Archiv der Gegenwart (1990), 60, Muenchen.
- Auswaertigen Amt (1991), Deutsche Aussenpolitik 1990/1991, Dokumentation, Bonn.
- Baker, J. A. (1995), *The Politics of Diplomacy*, New York.
- Bierling, S. (1997), "Wirtschaftshilfe fuer Moskau, Motive und Strategi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SA.", *Zeitschrift fuer Politik*, 44.
- Biermann, R. (1997), *Zwischen Kreml und Kanzleramt*, Paderborn.
- Europa-Archiv, (1989-1990), 44-45.
- Falin, V. (1997), *Konflikte im Kreml*, Muenchen.
- Genscher, H.-D. (1995), *Erinnerungen*, Berlin.
- Gorbatschow (1995), *Erinnerungen*, Berlin.
- Herrmann, F.-J. (1997-9-6), *Neues Deutschland*, Berlin.
-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 Modrow, H. (1998), *Ich wollte ein neues Deutschland*, Berlin.
- Neuman, E. (1998-3-5), *FAZ*, Frankfurt.
- Oldenburg, Fred (1998), *Die Erneuerung der sowjatischen Deutschlandpolitik in der Phase der Wiedervereinigung*, Koeln.
- Schoellgen, Gregor (1999), *Die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uenchen.
- Teltschik, H. (1991), *329 Tage*, Berlin.
- Weidenfeld, Werner (1998), *Aussenpolitik fuer die deutsche Einheit*, Stuttgart.
- Wettig, Gerhard (1994), *Das Ende der DDR 1989/90*, Koeln.
- Zelikow/Rice (1997), *Sternstunde der Diplomatie: Die deutsche Einheit und das Ende der Spaltung Europas*, Berlin.

The Renewal of Soviet Policy on German Unification (1989~1990)

Kim, Hyung-Yul*

Until the year of the revolution in 1989 in DDR, the division of Germany were seen as indispensable to the security of the Soviet's Empire. The opening of the Berlin Wall marked a dramatic turn in German history. But until the end of January 1990 even Gorbachev had the illusion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form the DDR. This illusion shattered when the authorities in DDR failed to rule under new conditions and the populace were pressing more and more for accession to the BRD.

The redefinition of Soviet policy on German unification took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a qualitative change of paradigms of Soviet foreign and security policy. Nevertheless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ithin NATO can be explained only with reference to a unique constellation of numerous factors. As to the rationale behind the rethink in Soviet policy on Germany, a reunited Germany would be more able to promote perestroika in the Soviet Union.

* Professor of Histo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mo@sookmyung.ac.kr